

시론



김일태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나라가 어수선하다. 이태원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벌써 한 달이 흘렀지만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그나마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서 다행이지만 벌써부터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였고 내년도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기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이런 우울한 상황인데도 여야 정치권은 대장동 개발 비리 대 야당탄압, 언론의 자유 대 국익 등으로 사사건건 맞서고 있으며 국민들조차도 진영으로 분류되어 주말마다 시위로 일췌하다. 참으로 불행한 국민이고 국가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여야 정치권, 정부, 대통령실과 심지어 지식인과 종교인조차도 비속어, 저질 막말, 망언, 독설이 오가고 있다. 총리는 외신기자 회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나”라는 질문을 받은 과정에서 통역 장에게 발생하여 참사 상황을 웃으며 농담조

언어의 기술과 품격

언어의 기술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말(음성)과 글(문자)을 표현하는 기호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여 상호 이해하는 의사소통체계이다. 말과 글은 상호 간에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술과 품격이 요구된다. 언어의 기술은 소통과 공감 능력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언어의 품격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품위와 격식이 배어있는 것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 준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내뱉은 말이나 조롱하는 글은 이미 언어의 기술과 품격을 상실하여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사라지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여야 정치권이나 정부,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말과 글들이 상대방만을 반박하거나 비방하려는 속셈에서 악의적이거나 못마땅하고 모진 언어를 구사하지만 국민들은 위정자들이 자신감이 없고 상대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행위로 보일 뿐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여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왕조 시대에서와 달리 글로 국가의 주인인 군주를 설득하여 공감을 얻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한비자(韓非子)에서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전국시대 한비(韓非)는 난언편(難言篇)에서 군주에게 “말하기를 두려운 설득을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정치적 대립에서 국민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남 탓 타령만을 영무세처럼 말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위정자들은 말과 글로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의 소통의 시작은 설득을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황 이룬 광주·전남 반도체단지 국회 토론회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운영지침을 고시하면서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 사업으로 유치를 추진 중인 광주·전남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희재 양향자 이용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 시의회, 전남도, 도의회, 광주·전남반도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광주전남지역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기업, 연구기관,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종갑 반도체산업육성추진위원장이 밝힌 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유수의 대기업이 RE100을 선언한 가운데 광주·전남은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최적지다. 또 자동차, 에너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전방산업 수요, 즉시 공급가능한 부지 및 용수·물류망 등의 인프라가 뛰어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을 심본 활용, 선도에 나가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절차, 요건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단지 유형은 개별기업 또는

개별기업군의 사업장에 지정하는 ‘개별형’,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공급 및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를 활용하는 ‘단지형’으로 나뉜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내 대학에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학과, 연구기관에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업에 부설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AI(인공지능) 기반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를 추진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교우위 강점을 내세운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지속 확장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으로 다음달 예정된 특화단지 지정신청 공모 심사에 철저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너나 없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광역단체간 협력해 나선 곳은 광주·전남이 유일하다. 물론 재생에너지와 용수, 인력 공급 등 모든 면에서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선 8기 첫 상생 사업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지역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5·18 진압 헬기 등 전시 신중해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내본 예산 심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출동 기증 장비 이전·전시 예산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당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진짜는 아직 아물지 못했다”며 “다들 제대로 나아가야 하는 사업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되고 진지한 고민과 담론 형성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것과 같은 기종으로 폐기를 앞둔 장갑차 3대, 전차와 헬기 1대씩 5대를 군부대로부터 넘겨받아 5·18자유공원에 전시해 상흔을 되새길 역사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 의원의 지적대로 국가폭력의 흉기이자 도구를 단순히 보여줌으로써 트라우마나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려스럽다. 하지만 광주시는 고통받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당시 사진과 함께 하면 엄숙한 환경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난 시민정신

을 알리는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편성 과정에서 5·18 관계자들로부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면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통해 되살릴 방침이다.

5·18 진압을 위해 쓰인 군사용 무기다. 찬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광주시가 피해자와 유족을 중심으로 더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40년이 훌쩍 지났어도 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는 때문이다. 항쟁의 중심지 전일빌딩 앞을 지나지 못하는 사례까지 보더라도 치유하기 어려운 아픔이 배어있다.

정 의원은 유공자와 각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리있다.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 광주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꼼꼼히 따져다. 지역 공동체 동의를 과정을 통해 재검토했으면 한다. 5·18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선 광주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시가 되도록 추진돼야 하겠다.

기고



박고형준 장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폐지돼 된 지 26년이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등 학교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필자는 학부모 자격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되어 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인 동시에 시민운동가로서 제안·감시자 역할이 되고자 학교운영위원 출마의사를 밝혔

교육감 간선제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이유

지만 선출 시기마다 짙은 구석이 있었다.

학부모 출마자 수와 학교운영위원(학부모 위원) 정수가 같아 무투표로 선출되는 등 잠잠이 선거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투표 선출은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할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투표에 대한 무관심을 키운 단 계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약 공개도 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 데다 유권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의 대표성 있고 그 역할이 막중한 만큼 각각 주체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부모의 무관심과 맞먹이 가장 증가 등 원인으로 인한 참여 기피로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지역 대다수 학교에서도 학부모 87.3%, 교원 89.0%, 지역인사

89.8% 등 투표 없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 조사 결과)

이런 현실 속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 투표 등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정부와 국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원 미달을 면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간곡히 사정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교육감 선출 권한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표율 저조로 이어져 잠잠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인단의 수가 적어져 학교운영위원을 상대 매수나 부정의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될 게 불 보듯 뻔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보안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에 교육주체인 교사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 등 학생의 참정권을 부여해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본 선거보다 관심이 적은 보결선거, 단지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실시하자고 정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제1조, 31조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주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되새기길 바란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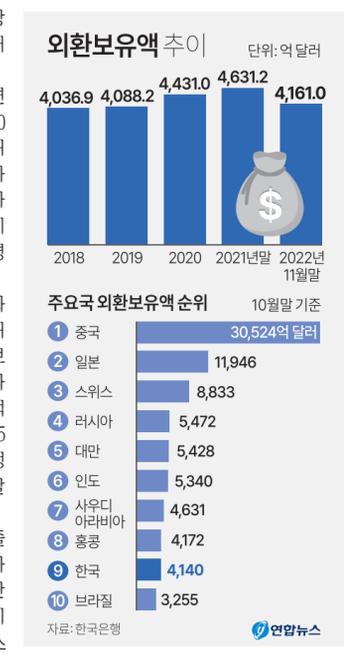
외환보유액 11월 4천161억달러, 21억달러 ↑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매도) 계속 줄어들던 외환보유액이 11월 말에 늘었다.

한은이 5월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61억달러로, 10월 말(4천140억1천만달러)보다 20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8·9·10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3.5%(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외화자산이 늘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제·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56억2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32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146억95천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3억6천만달러)도 각 3억4천만달러, 1억달러 늘었다.

예치금(266억8천만달러)은 16억1천만달러 줄었고,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4천140억달러)으로 세계 9위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겨울철 복병 블랙 아이스!

요즘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아찔 지적으로 일교차가 심하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한파와 폭설, 빙판길 등 운전자가 고약한 시련의 계절인 겨울을 앞두고 오늘은 도로위의 불청객인 블랙아이스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한다.

자칫 생소할 수 있는 블랙아이스란 새벽 또는 밤 사이 기온이 급감하면서 녹았던 눈이나 빙방울이 아스팔트 도로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되는 것으로 아스팔트의 검은색에 가려 얼음처럼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해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틈새에 스며들어 밤 사이 얼어붙는 현상을 말한다. 물론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눈길이나 빙판길에 주의 운전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처럼 블랙아이스 구간이 단순

히 도로가 조금 젖은 정도로 착각하기 쉬워 육안식별이 어려운 살얼음이 끼는 현상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블랙 아이스 현상은 영화감독이 눈과 결합하면 도로위에 남아 있던 수분이 도로 표면을 미끄럽게 하는 슬라이드 효과가 발생하여 더욱 찾아진다고 한다. 때문에 블랙아이스 현상 발생지점을 의심하거나 간과하고 운행할 경우 자칫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블랙아이스 발생 도로는 일반도로의 14배, 눈길에 비해 6배 정도 더 미끄럽다고 하니 주의에 주의를 해도 엄살은 아닐 것이다.

또한 빙판길 위에서는 평소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제동거리가 필요하다 한다. 실제로 최근 전남 모 지역 고속도로상에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차량 1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지역에서만 총 292건의 결빙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지역 대부분 블랙 아이스 사고 대부분은 교량위나 고가 도로 밑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아무튼 겨울철 빙판사고의 상당 부분은 잘못된 운전습관과 방심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눈이나 빙판이 깔린 도로를 운행할 때 블랙아이스 발생이 잦은 산모퉁이나 다리위, 해안도로, 그늘진 곡선도로 등 주변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을 운행할 경우 급제동이나 급가속은 절대 금물이다.

(김덕형·장성경경찰 정보안보조사과)

급작스런 제동장치 조작은 차량을 더욱 쉽게 미끄러지게 하여 스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급정지를 해야 할 경우라면 풋 브레이크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브레이크를 나누어서 밟거나 한 단계 낮은 저단 엔진브레이크로 변경하는 등 조금이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블랙아이스 발생 지점을 통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끄러진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은 피하고 핸들을 직진 방향으로 유지해 2차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에는 자신의 운전기술과 경력에 맹신하지 말고 항상 서행하는 습관을 기르고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하는 등 나와 가족이 안전한 겨울철 운행을 바란다. 겨울철 안전운행의 정답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김덕형·장성경경찰 정보안보조사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건진보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입무국 650-207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제1호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